부 록

1 인터뷰 자료
2 설문지

1 인터뷰 자료

1.1 자문회의_착수(2014.1.22.(수) 10:00-12:00)

1.1.1 김OO(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노원구는 통반장의 기능확대하는 조례안 만듦. 행정보조기능에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으로 확대함.
- 서대문구와 노원구는 통장예비학교, 통장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교육도 실시함. 통장기능을 활용하여 읍면동의 허브기능화를 도모함. 이는 사회복지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
- 통장의 업무는 오히려 증대하는 셈임. 안행부에서는 읍면동자치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도 있음. 이렇게 되면, 시도자치-시군구자치-읍면동자치가 될 것임.
-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반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의 6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즉 공동주택지역과 단독주택지, 농어촌에서 업무량과 내용에 차이가 남.
- 주민자치센터에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함. 활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통장임. 지역인재를 잘 알고 있고, 준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음. 책임감 있게 동의 행사에 참여도 잘함.
-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 직능대표, 주민대표로 구성됨. 지역대표로서 통장을 지역에서 직선하여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함. 즉 주민자치회의 1/3을 구성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지침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승계해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60%가 그대로 승계함. 경남의 경우는 100% 승계함.
- 주민자치회는 자기재원이 필요함. 자신이 세금을 내고 참여하여야 관심을 가지게 됨.
-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을 내야 함.

- 자신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112 **이O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통반장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것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군포시는 통반장 직선제를 실시한 적도 있으나 3~4년 전에 이를 폐지함. 투표의 참여율이 낮고, 공무원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움. 행정보조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은 본질상 부합하지 않음. 만일 본질을 바꾼다면 가능할 듯함. 선거로 뽑히면, 행정의 지시나 말을 잘 안 들을 것임.
-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참여하는 사람이 뽑으면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10명이 참여하여 대표자로 뽑으면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로는 성과가 부정적임. 선거로 뽑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름.
-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도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 프로그램참가자도 참여하고 있으나 모든 주민의 '대표성'은 없음.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안행부의 의지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함. 통장,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그룹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서 구성하고, 여기에 지역을 대변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현재는 권한이 없음.
-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도 돈만 지원하고 '권한'이 없음. 구청에 돈주고, 사업실시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가 없음.
- 중간지원조직은 서울시에 이미 많음. 겹치는 영역도 많음. 여성가족정책분야는 100여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음. 센터도 많아 140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음. 많이 만드는 것은 대안이 아님.

- 현재의 기존조직을 활용해야 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하게 해야 함.
- 권한을 안 주면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돈을 걷을 때,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의 문제가 발생함.
- 의회를 만든다고 주민자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님.
- 권한을 주기 어려우면 강화라도 해야 함. 강화하는 방법은 통장의 위촉권을 동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주도록 하면 위상이 올라갈 것임.
- 읍면동레벨은 예산결정권이 있어야 함.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함.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필요함.
- 다양한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함.

113 **곽OO(대전대 행정학과)**

- 통반장제도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함. 행정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움. 즉 서비스 공급이란 측면에서 필요함.
- 주민자치에 역할을 하느냐는 별개의 의제임. 정보전달이나 통계조사 등의 사무에서 행정의 보조역할로서 필요함.
- 통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대표가 아님. 대표성은 선거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고 승인한다는 자치철학이 있는 것임. 그리고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임.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임.
-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선거제도에 매몰되지 말 것임. 새로운 대표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대표는 선거를 통한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음.
-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참여지분을 주어서 대표성을 확보함.
- 선거란 방법에 매몰되면, 또 다른 정치를 불러들이게 됨.
- 뽑힌 사람과 실질적 대표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음. 이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문제임.

- 선거선출을 통하여 권한이 부여되는데, 주민자치회에 선거를 도입하면, 비공식적 대표로서 비선거선출직도 참여하도록 해야 함.
- 마을공동체활동가를 주민자치회에 참여시켜야 함. 공동체활동을 끌어들일 때, 마을의제가 나오게 됨. 주민자치회도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함.
- 보수적 지역유지와 진보적 마을공동체가 만나서 같이 생각해야 함.
- 3가지 모형 중에서 협력형은 읍면동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주민조직형은 결사체 민주주의의 구현임. 성미산공동체의 경우는 주민이 모여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냄.
- 인구규모가 2만~5만 정도가 되면, 정부가 있어야 함. 그 밑에 결사체 조직이 활동할 수 있을 것임.
- 행정모형이 바뀌고 있음.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전부 제공할 수는 없음. 주민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책임을 가지게 하여 공동생산이 가능하게 해야 함.
- 파출소를 없애고 지구대를 만들었는데, 이는 경찰행정의 실패임.
- 행정동 단위에서 주민과 맞닿으면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고, 주민도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참여하여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대표성도 확보해야 함.
- 대전의 경우, 마을만들기가 확산되고, 공공성을 말하게 하고, 마을을 위해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함. 내팽겨쳐진 것이 아니라, 공적임무를 부여하고, 주민이 간여하게 해야 함. 행정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함.
- 동단위의 주민자치회는 대표성을 가져야 함. 그리고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현재는 구에서 정해버리고 집행은 행정이 해버리니 주민자치의 영역이 없음.

- 규모란 측면에서 동의 하부에 마을이 있고, 마을단위에서는 돈을 걷어서 도서관도 만들고 자원을 운영할 수 있음.
- 결사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없음. 결사체는 정체성을 가지고 동규모의 자치회와 연결고리를 가지면 될 것임. 그 연결고리는 자발적인 것이고, 자기필요에 따라서 가지게 될 것임.
- 이러한 결사체에 대해서는 정부는 떨어져서 촉진자의 역할만 하면 될 것임. 동규모의 계층에서 만나면 될 것이고 행정과 연결되어야 할 것임.
- 해외사례를 보면, 페리시정부(perish government)는 자율적인 것임. 즉 결사체의 수준임.
- 네이버후드 포럼(neighborhood forum)은 정부가 아님. 공원을 계획(planning)하거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지역에서 할 것은 지역 스스로 하는 것임.

114 **황OO(서울시 행정과장)**

- 통장은 현장을 모르니 불필요하다고 함. 도로명 주소전환으로 인해, 집집마다 홍보하는 것은 통장의 임무임. 통장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음. 동네여론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임.
- 시민단체가 있으나 초보적 단계임. 민간에 맡겨서 공적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미국은 주민 5만명이면 시정부임. 공무원 15명으로 하는 것은 무리임.
- 주민자치회의 모델로서 통합형까지는 가능함. 동이사회(board of director)를 두고 동장은 상임사무국장으로 역할을 분담함. 구성에서 대의제를 가미하는 방식임.
- 실현방안이 중요함. 25개 자치구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이 동일하게 선출되었기에 시의 정책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예를 들면, 공유공간을 시에서 빌려주는데, 구에서는 코드가 맞으면 따르지만, 안맞으면, 안따르는 경우가 발생함.

- 시와 구가 엇박자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시정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시가 구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협력하여 잘 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럼에도 구청공무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함.

115 김OO(서울대 행정대학원)

- 주민스스로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함. 내 일인데도 자신이 책임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음. 구청이 와서 치우라든가 해서는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지역문제의 갈등은 양보가 필요한데, 이를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가 됨.
- 읍면동 단위는 서포트해줄 필요가 있지만, 동네단위(10~20명이 모여서 하는 것)까지 행정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하도록 해두면 될 것임. 즉 그 마을에 꽃을 심어서 꽃마을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함.
- 통장은 필요함. 누군가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통장은 기속되는 느낌임.
- 개선방안은 첫째, 통장과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찾고, 둘째, 구성을 융통성있게 할 것임. 즉 꼭 선거만이 아님.
- 지역유지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들이 지역을 위해 기부하게 하고, 시범지역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함.

12 자문회의_최종(2014. 2. 20(목))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OO

- 최근의 읍면동 개혁에 대한 동향 중에는 읍면동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음. 시군구의 사무나 기능 중에서 읍면동으로 이양할 것을 탐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도 동사무소를 복지허브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행

정직렬을 시군구로 복귀시키고, 사회복지직렬만 둠. 사회복지 허브화도 구상하고 있음.

- 동의 기능이 확대된다면 통장의 기능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읍면동자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허브화 기능을 해야 하고 연계해야 함.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보면, 시에만 조직이 있고, 구에는 2년 내에 만들려고 한다고 함. 그러나 동을 빼놓고 있음. 실제로는 마을공동체의 형성은 동에 지원센터를 두어야 할 것임.
- 마을넷이라고 하는 것이 23개 자치구에 있는데, 이들은 자치구레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역시 동단위의 조직은 결여됨. 마을넷은 사실 자치구단위가 아니라 동단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마을만들기지원조례가 시단위에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단위에 조례가 있어야 할 것임. 주민자치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
- 동단위가 스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함.
- 자치통장의 개념은 신선함. 통장을 직선하고, 동단위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연계하여 동단위와 구청단위에서 활동하게 해 주는 것임.
- 주민자치회를 NGO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음.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공동체를 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함.

122 **대전대학교 교수 곽OO**

- 주민자치의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그래야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함.
- 주민자치란 첫째는 공동체형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임. 행정과정에 조직의 대표(지지세력을 가지고)로서 참여하는 것임. 셋째는 양자가 연계되어야 함.
- 주민자치는 대표가 행정과 만나야 함.

- 공동체라고 하는 기반도 없는데, 사무를 위임, 위탁하면, 주민자치가 아님. 민간에 대한 위탁일뿐임.
- 주민자치가 필요한 것은 공동생산을 위해서임. 행정과 주민자치는 필요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해야 함. 주민자치는 지역지식(local knoeledge)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공무원은 전문지식(profesional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동사무소를 폐지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구의 하부조직처럼 될 것임.
- 주민자치로서의 기반을 갖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조직이 있어야 함.
- 공무원이 빠질 경우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역에 참여하는 축이 빠지는 것 아닌가? 지역단위에서 행정축과 자치축이 병립해 있어야지 통장이나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임.
- 행정과 주민자치가 만나는 중간기구가 있어야 할 것임.
-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다양한 센터들은 부처할거적인 센터임. 각각의 센터는 자기의 사업만을 하고 있어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함.
- 지역공동체단위에서는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여기에 자치회가 있어야 하는 것임.
- 근린이란 단어를 최근 많이 씀. 마을이란 단어가 친근하나 동네가 공동체적 속성에 가까움.
- 대표의 개념에 대해 재고해야 함. 대표가 반드시 선거선출로만 되는 것은 아님. 대표관료제와 같이 사용할 때는 다양한 계층이나 인종, 연령, 성별에서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서 자격제만을 고수하지 않게 됨. 이때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구성상의 대표성'을 갖도록 함.
- 선거를 통한 대표는 네이버후드카운실이라고 하여 '대의대표'만을 생각함.
- '구성대표'도 있음. 다양한 구성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대표라고 할 것임. 즉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라고 할 것임. 예를 들면, 여성

의 비율을 40% 이상 넣게 한다든지, 젊은 층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이는 구성대표를 가지는 것임.

- 주민자치에는 규모의 문제를 생각해야 함. 이는 계층의 문제로 이어짐. 주민자치에도 2층제의 주민자치를 고려해야 함. 그리고 민관의 협치를 생각해야 함.

	주민		행정
근린 주민자치체	주민자치위원회	민관협치체[29]	동사무소
풀뿌리 근린공동체	마을공동체		

- 대전에서는 판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소외의식이 크고, 의료시설도 없음.
-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gate community가 되면 부자와 빈자 간에 사는 지역이 갈라지고,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함. 가난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게 하여야 하므로, 부자와 빈자가 같이 공동체로서 살 수 있어야 함.
- 공동체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아파트단지에 같이 살게 하거나, 아파트 층간에 같이 살게 하는 방식까지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음. 공동체를 만들어주어야 슬림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피터 드럭커).
- 삶의 영역을 정치영역-경제영역-시민사회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 경제영역에서 조직화가 용이하게 일어나고, 정작 시민사회의 조직화는 지지부진함.
- 주택재개발의 형태로 경제영역의 조직, 결사체가 발달함.
- 경제영역에서는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목적임.
- 시민사회영역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자발적으로 조직화가 잘 안되니, 어느 정도의 인위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29 민관협치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동네기획 등의 권한을 부여

정부영역에서 해야 함.

- 읍면동 단위와 커뮤니티단위의 조화발전이 필요함.
- 커뮤니티 단위에서는 아파트 등의 대표가 조직화되고, 읍면동 단위는 인구 4~5만 정도의 규모를 생각함.
- 참여정부 시절에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통합이 논의됨.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를 해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끼워 넣게 됨. 허태열의원도 간여함.
- 일본에 대한 정확한 연구 없이 주민자치회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논의로 흘러감. 원래의 특별법에는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을 명확하게 두었다가 나중에 빠짐.
-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400만원을 마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의제형 성비로 지원함. 이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

12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OO**

- 군지역은 고령화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고령화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함. 주민이 군청에 오기가 힘드니, 행정이 다가가야 하는데, 군단위는 너무 넓음.
- 읍면동자치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함. 복지허브화하여야 함.
- 아파트입대위나 아파트의 반상회를 보면, 가격을 정하는 등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관리비도 투명화되고 있음. 물론 회장의 편법사용 등의 잡음도 있으나 참여의 실익을 살리도록 노력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대표기구로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원이 되고, 이를 어떻게 뽑는가가 관건임.
- 주민자치회의 기능, 특히 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함. 개호보호 등의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함.
-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려우니, 몇 개를 꼭 살려야 함.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야 함.

-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함. 경험을 분석해야 함.
- 통반장제도에서 대표성을 갖게 되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입대위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자치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긍정적임.
- 주민자치에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여전히 필요함.
- working group으로서 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폐지하면, 동네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동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방안을 이번 기회에 구상해야 함.
- 장로교가 쇠퇴한 것은 빈부격차가 심해서라고 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성장이 어려움.
- 법제처는 현행법으로는 통합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고 함.
- district community를 만들고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함.

124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 행정협력팀장 김OO**

- 맑은아파트만들기의 경험으로 볼 때, 주민자치가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래도 한다고 하면, 유일한 제도라는 양면적 생각을 하게 됨.
- 입대위는 이미 동사무소기능을 하고 있음.
- 입대위는 도로유지관리, 놀이터, 방범, 청소, 환경재활용, 교육문화기능까지 하고 있음. 다시 말해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자치구에서 공동수탁보조금을 주기도 함.
-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비로 하고 있음. 재정자주권이 있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성도 있음. 임원들 선출을 간선으로 하다가 직선으로 선출하기도 함.
- 250세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3,000세대를 담당하는 입대위도 있음. 이는 이미 하나의 동사무소 규모임.

- 참여율을 볼 때, 10% 이상 참여가 용이하진 않음.
- 주민자치회보다는 관심이 높음.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피선거권은 소유자에 있음. 세입자에도 투표권은 부여함.
- 현재 80%가 세입자임. 전에는 이들의 투표권이 없었는데, 현재는 있음.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율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관점에서 보면, 임대주택에서도 주민자치는 가능할 것임. 즉 현재는 소유자들의 대의기구로서 입대위를 주택법에서 생각하고 있기에 임대주택에서는 입대위를 못만듦.
- 임대주택에서는 재정자주권이 없어 입대위가 없음. 무지개 프로젝트는 임대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 혼합관리를 하기도 함. 즉 임대자지역과 소유자지역이 구분되어 있어 2가지의 대표체계를 갖고 있고, 관리사무소도 2원화되어 있기도 함.
- 재개발조합도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입대위는 의사결정체이고 단일성이 강함.
- 아파트가 세워지고 나면, 입대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때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과 기존의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함.
- 입대위는 이익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민자치가 되려면,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자치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할 것임.
- 입대위는 투명해져야 함. 이제는 재건축을 해도 이익이 그다지 나지 않기에 입주민들도 입대위의 재정투명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조합의 사소한 부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리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됨.
- 재건축 자체의 프리미엄 이익은 이제 거의 없어짐.
- 국토부도 사적자치원칙에 입각하여 개입하지 않다가, 개입하는 방향으

로 전환한 것이 2006~2007년 사이임. 계기는 당시 아파트 부녀회가 폐기물재활용과 알뜰시장 등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재정투명성이 문제가 됨. 또한 아파트입대위와 조직 간 갈등을 일으킴.

- 법률을 개정하여 입대위로 넘기도록 함.
- 현재는 관리비의 오용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13 인터뷰

131 광진구 행정관리국장 박OO, 과장 오OO (2014. 1.17 10:00-11:00)

- 통반장제도의 예산은 광진구의 경우 12억이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주민의 참여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통반장제도의 유지는 필요함.
- 통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치구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통반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축소해야 하거나, 통반장에게 업무를 배분하는 조직은 확대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통반장 선거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선거업무자체가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것임.
- 동회가 있는 시절도 있었음. 그때는 선거를 실시했음.

132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 김OO, 정O (2014. 1. 24. 13:30-15:00)

- 통반장은 행정의 계통이므로 선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선거직이 될 경우 행정계통의 지시나 동원에 응하지 않을 것임.
- 통반장은 민방위계통의 일을 하는 정도임.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유지로 되어 있어 행정에 잘 협조하지 않음. 통반장들은 동행사 시에 잘 참석하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음.
- 주민자치업무는 시업무가 아니라 자치구업무이므로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하지 않고, 자치구단위의 평가를 함. 이는 점검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음.

- 평가를 해보면,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음. 평가위원인 이OO 교수 등도 이러한 지적을 하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생각보다 매우 잘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함(김OO).
-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와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져 조례가 보다 주민참여적으로 된 것으로 보임.
- 주민자치회의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자치구에서 '사업비'로 전환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음.
-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를 분리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나, 최근 양자를 합쳐서 혁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함. 안전행정부의 사업으로서 이전에도 있었음.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 현재는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몇 주 안 되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정OO). 현황이 파악되면,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함.

133 **광진구 화양동 동장 정OO/주민자치위원 조OO/ 통장 양OO 인터뷰 (2014.1. 28. 10:00-15:00)**

- 화양동은 역사의 유서가 깊음. 세종대왕 때 목장과 사냥터였고, 화양정이 80칸의 규모로 있었던 곳임.
- 대학이 소재하여 젊음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려는 비전을 가짐.
- 이 지역을 홍대앞이나 동숭로 등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려고 함. 건대옆 구 민중병원자리에서 공연을 실시함(5월~11월). 건대는 미대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있는데 환경이 정비된 마을로 만들려고 함. 화양동에는 100여곳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40곳

으로 줄음. 통반장의 노력으로 왜 무단투기가 되는지, 통장이 청소하기 봉투나누어주기 등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함. 처음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0여명이 일하였고, 공공근로에 7~8명을 투입하기도 함. 또한, 원룸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업자에게 계약할 때, 쓰레기 관리에 대하여 홍보도 함.

- 주민은 이기적임. 봉사는 극소수가 함. 주민자치위원의 선출은 시기상조라고 봄.
-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도 철저히 자기건강관리나 자기취미로 참여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음.
- 일본은 자원봉사자가 도서관에서 일함. 자원봉사자가 사회기여의 자긍심을 가짐. 마인드가 되어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어려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듦. 10인의 주민과 간담회에서 각각 200만원씩 2,000만원의 기금을 모으려 했는데, 그 자리서 동장이 300만원, 지역주민이 출연하여 4,000만원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5,000만원과 합해서 9,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씨앗카페를 조성함.
-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재부담당이어서 신청하였으나, 건교부(도시계획)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안행부로 이관됨. 2013년 8월에 인가가 나서 법인등록하고 사업자 신고하여 영업을 시작함.
- 서울시의 사업비로 7,500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은 시설비로, 2,500만원은 운영비로 받음. 그러나 실제는 9,000만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감.
- 현재 하루 250잔의 커피가 나가 바리스타 4명 고용비, 운영직원 인건비 지불이 가능함.
- 느티나무 인근 조성비로 최근 5억의 사업비를 받음.
- 사회적기업의 이사 7인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함.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친목단체수준임. 교육을 받아야 하고, 10시간을 봉사해야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함.
-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99% 동직원 의존), 마을축제, 느티마켓(1달 1번 운영), 대보름 척사대회, 경로잔치, 복데이(삼계탕 대접), 일일찻집(공동기금 3천만원 냄) 등을 운영함.
- 씨앗나눔 마을연구소는 도난주(현, 서울시 주택정책과 연구관)의 도움으로 운영됨. 그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스웨덴에 유학해 석사학위를 받았음.
-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별로 없었음.
- 위원장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필요함.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 식은 문제임.
- 동장이 수소문하여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함.
- 자치위원장의 책상도 있고, 직원을 두어서 사무국이 있어야 퇴직자나 교육, 문화 관련 지역인사들이 나오려 할 것임.
- 정치권의 견제도 있음.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1년으로 제한하여 지역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사무국이 설치되고, 둘째, 예산이 있어야 함. 위원장 활동비(20~30만원이라도)도 주고, 유급직원(70만원)을 둘 수 있어야 함. 운영비가 있어야 함. 셋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넷째,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어야 함. 다섯째, 권한이 있어야 함.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자치회관에 사무국, 사무실이 반드시 별도로 있어야 함.
- 유급직원이 있어 공공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함. 회계처리할 역량도 있어야 함.
- 씨앗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주부 4명(각 5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2명(60만원) 고용이 가능함.
- 문화컨설팅기능도 해야 함. 커뮤니티 프로듀서로서의 교육도 필요함. 자치역량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동사무소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함. 이를 위해 사무국 능력, 공간확보, 재정투명성(1일 결산, 주간결산이 되어야,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아야 함)이 필요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고, 허브로서 역할해야 함. 부녀회,새마을부녀회, 통친회 등의 단체와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이들 간에 조정과 의결하는 기능해야 함.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함. 이를 제도화시켜 주어야 함.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유지로 구성함. 방위협의회 등 관변단체 출신이 정치목적으로 참여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해야 함.
- 사회적기업은 건축, 문화컨설팅, 디자인, 교육(어린이집), 약사, 상가번영회, 사회복지관, 목사 등으로 이사회(10명)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춰야 함.
- 현재의 자치위원회의 구성으로서는 한계가 있음. 조례로 규율하고 있는데, 조례입안권은 구의원들이 갖고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음.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 통장은 동장이 하는 일을 보조하기 때문에 필요함. 활용을 잘하면 복지문제 해결에 도움됨.
- 통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제설작업이나 수해복구 등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월급도 안 받기에 책임도 안짐.
- 공무원 조직은 책임을 짐. 자치는 자기결정-자기책임을 질 수 있나. 예산도 마찬가지임. 시기상조라고 봄.
- 과거에는 통장의 학력이 낮았지만, 현재는 행정능력을 보유함. 사회복지사도 50만원을 받음. 이러한 역할은 부여가 가능함.
- 현재 복지직원은 20~30가지의 일을 하고 있음. 100가지의 사무를 3~4인의 직원이 나누어서 함. 민간조직을 이용해야 함.

- 29개 통을 팀장 등 4명이 담당함. 2명은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2명이 전체를 돌아볼 수 없음. 복지도우미가 필요함. 이들에게 복지대상자를 확인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매달 통장회의 시에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 통장에게 사회복지보조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급여를 올려주며, 지역의 갈등조정역할을 하도록 함.
- 통장선거는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듯함.
-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려면, 주민 5%의 추천을 받아서 나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주민자치회는 숫자를 줄이고(10인 이하), 전문성을 높이며, 예산의 자립이 되어야 함.
- 법인체가 되어서 동네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정치가 당리당략으로 편을 가른다면, 자치는 지역공익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
- 소수정예의 지역사회전문가,지역사회운동가가 활동하도록 해야 함.
-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함.
- 정부를 축소하고 거버넌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공무원수를 줄인다면, 거버넌스 관련 예산을 주어야 함. 예를 들어 행정에서 1억을 축소하였다면, 거버넌스에 5천만원 정도를 배정해야 함.
- 행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장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급여를 올려주고, 복지사무 등을 하도록 해야 함.

134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통장관리담당(2014. 2. 3. 17:30)**

- 41개 통으로 구성됨. 통장은 공개모집으로 뽑으며(2013년 2통, 4통 통장모집 시), 2년 임기로 2회 연임할 수 있음.
- 자격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25세 이상으로 책임감 있고, 신

망이 높으며, 활동력이 있는 자임.

- 추천후보자 선정은 서면심사(필요시 면접심사) 후 구청장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통장선출을 선거로 하는 것은 아님. 추천에 의하여 모집함.
- 최근에서는 통장의 응모자가 없는 실정임.
- 통장은 주로 민방위관련 일과 전출입확인 등의 일을 함.

135 **권OO 마장동장/주민자치회장 (2014년 2월7일 14:00-16:00)**

-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사업으로서 지역정체성 찾기를 제안하였음.
- 이미 '마장동이야기'를 책자로 만들어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였음.
- 2013년 6월에 선정되었고, 9월에 조례를 공포함.
- 주민자치회는 4개의 분과로 운영됨.
- 60명이 공모하여 30명을 선정함.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원로 2명, 단체장추천 등 9명으로 구성하였음.
- 안전마을분과위원회, 마을기업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로 구성함.
- 마을청소를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모여서 실시함.
- 청소문제와 방범문제, 주차장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임.
- 마을농원도 운영함.
- 주민자치회사업으로 마주보기카페를 운영함(성동구에서 지원비를 받았고, 마을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임. 운영수익을 가지고 마주모고장학회를 운영할 예정임. 카페 내에 간이도서관과 농촌특산물판매매장을 설치함. 카페운영자인 주민자치회임원이 재능기부를 통하여 바리스타교육을 실시함).
- 마장동주민자치회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함.
- 안행부의 지원금은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교부가 안됨. 이미 공사비로 사용함.

- 성동구가 위탁사무위탁비 2,500만원, 수탁사무비 4,400만원을 배정함.

136 **김OO 역촌동장. 차OO 주민자치회장. 통친회장 (2014. 2. 11. 14:00-15:30)**

-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사업으로 6억(1억)을 받아서 10억의 CCTV설치 사업에 투입하였음.
- 주민자치회의 사업비나 운영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 이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주민자치회 구성을 2013년 10월에 시작하였음. 9월에 조례가 통과하였음.
-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젊어짐.
- 여성위원의 비율을 40%로 구성함. 70대의 위원도 있음.
- 공모로 하였고 구청장이 임명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였음.
-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8명 들어 있고, 통장도 1~2명 들어 있음.
- 상근직원을 파트타임으로 두고 있음. 활동비로 40만원을 지급함. 사무실은 지하식당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음.
- 13통 안전마을 만들기에 10여명의 주민이 참여함.
- 의제를 논하기 위하여 매주 1번씩 모이고 있고, 10여 차례 모임을 가짐.
- 서울시의 주거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의 주거재생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음.
- 홍익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방문과 조사를 하고 있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안전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함.
- 통장은 40여명이 있음.
- 통장으로서 월20만원 정도 받는데, 구청이나 동의 회의, 행사 등 참여해야 하는 일이 많음.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2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임.
- 통장을 뽑는 것이 쉽지 않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음.

- 반상회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음.
- 구청장이 당선되었을 때, 처음으로 반상회를 한 적이 있는데, 10여명의 주민이 모임.
- 역촌동의 경우는 2개 동이 통합한 대동임. 인구가 5만 정도임.
-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단독주택이 중심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등 수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옴.
- 동사무소의 담당자의 능동성이 엿보임.
- 마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할 듯함.
-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듯이 통마다 마을관리제도를 두고 청소, 방범, 조경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세대당 월1,000원의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임. 400세대이므로 월 40만원을 거두어서, 마을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지출함. 예를 들어 마을청소를 하도록 1명을 고용하여 마을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임.

137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기획실 기획1팀 문OO 팀장(2014. 2.11. 16:30-17:30)**

-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회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 성미산마을 만들기는 상향적인 자발적인 모임이었음.
- 육아부터 시작하여 생협, 대안학교, 성미산지키기 등의 운동으로 발전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221억원의 사업비를 관리함.
- 3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형성비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부터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북카페조성사업비는 7~8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2~3개에 불과함.
-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하여 사람만들기, 경험과 역량 함양이 중요함. 이

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참여할 때, 주민자치회가 실질화될 것임.

138 **강남구 역삼2동 권OO동장/주민자치회장 인터뷰(2014.2.12. 10:30-12:00)**

- 지역 여건이 50%는 아파트지역이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지역임.
- 동주민센터에는 일상사업비가 없음.
- 민원이 가장 많은 동 중의 하나임. 월 일인당 1,800건을 처리하고, 일단위로는 120건을 처리함.
- 민원팀은 1층, 복지팀은 2층에 사무실이 있어 분리운영됨.
- 통장기능은 약화되어 있음. 전산화로 인하여 기능이 축소되고, 동네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됨.
- 통장의 요건은 거주 1년이면 되고, 역할도 주민의견 전달과 구정전달 정도임.
-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인해 돈을 받기 위해 한다는 측면과 수당을 안주면 순수한 봉사로서 내가 선택해서 한다는 측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음.
- 통장들도 통장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름.
- 개인생활이 중요하여서 통장역할을 안하려고 함.
- 주민관리측면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고, 민방위 등의 국가안보차원에서 전달역할을 하는 정도임.
- 주민자치위원회는 취미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권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음. 강남구의 경우에는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함. 15개 동에서 문화센터를 설치하였고, 문화센터가 아닌 동은 7개동에 불과함.
- 통합형 정도는 가능할 것임. 주민주도형은 요원함.
- 현재는 프로그램운영에 행정이 깊이 개입하고 있는 형태임.
- 위원구성에서 처음에는 동지역단체장들이 들어 왔으나 임기만료로 나감.

- 단체로는 방범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재활용추진협의회 등이 있음.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건의하는 수준에 불과함.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어야 함.
- 실행력이 있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통합형이 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에 행정력이 있어야 함. 조직도 주어야 함.
- 아파트입대위는 이익단체여서 주민자치라는 공식적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이권화되어 있고, 주민의견반영이 잘 안됨.
- 공문을 주지 않으면, 관리소에서 방송도 잘 안해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2명의 동민이 참여함.
-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히 참여하게 해야 할 것임(주민자치위원장).
-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첫째, 선발방식이 바뀌고, 둘째, 할 일이 규정화되고, 셋째, 시스템이 이루어져 건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조직이 있어야 함.
- 연합회도 조례 근거를 가지고 사무실을 둘 수 있거나 예산을 수반할 수 있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선출방식도 바뀌고,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처우방식도 바뀌어야 함.

139 **서초구 반포본동 김OO 동장/ 담당주무관 인터뷰**

- 동전체가 아파트단지인 지역임. 한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전체를 관리함.
- 30년 이상 된 지역으로 고령화가 심화됨. 주민들 간의 친밀도가 높음.
-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임.
- 통장없이 일하긴 어려움.

- 모임이 많고, 행사도 많음. 홍보물배포 등에 통장이 있어야 함. 동원이 가능함.
- 복지 등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좋음.
- 통장의 추천은 통친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함.
- 선출을 직선으로 하는 것은 주저됨. 일 잘하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로 뽑으면, 일을 시키기가 어려움.
- 통장(15명) 중에는 아파트동대표(100여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중 입주자대표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할 사람이 별로 없음.
- 통합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봄.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입대위에 맡겨도 잘 할 것임.
- 주민자치회도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주민자치형도 가능할 것임.

1 3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유OO(2014. 2. 18. 13:30-15:30)**

- 센터에서는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의 씨앗조성을 위한 사업비만 집행함.
- 50만, 100만, 150만원 등을 지원하여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가들을 처음에는 주도하지 않도록 함.
- 주된 사업비는 여성정책관실, 실·국에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함.
- 센터는 상담원과 멘토를 보유하고 지원함.
- 1500그룹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평균 5명이라고 하면, 7,500명 정도의 씨앗이 조성됨.
- 이들을 각각 네트워크하여 23개의 마을넷을 형성하였음, 민관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동네사람들이 시사업에 당첨되었을 때, 효능감을 느

끼게 됨.

- 관 주도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 톱다운으로 뿌리는 성격이 있음.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음.
- 풀뿌리를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서 보수정치쪽이나 진보정치쪽이나 처음에는 냉담하였음. 보수쪽에선 특정인의 사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진보쪽에선 낭만적이고 한가한 소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재는 마을사업에 대한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됨. 당시에는 진보쪽의 사람들이 중심인 성미산, 성대골, 삼각산 등만이 있었으나,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상담원의 역할도 함. 경력이 3~5년의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함. 주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권력세력이라고 봄. 특히 관변의 마을유지들이 중심이 됨. 자영업자나 부녀회와 토호(땅을 가진)들이 대부분이라고 봄. 특히 자영업자들은 동네의 백수(?)라는 측면도 있어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력을 가진 그룹이고, 지역정치권력과 연계됨.
-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연계되어 있음.
- 2013년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개방함. 공모사업트랙을 만듦.
-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냉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였음.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맞춤형의 지원을 하고자 함. 9개 정도에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공모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개혁방안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교체가 일어나야 함. 민주화가 되어야 함.
-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전업주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네백수(동네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를 매개로 하여 주민의식이 뛰어남. 관계력이 뛰어나고 창의력, 기획력이 있음.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음.
- 둘째, 권한을 주어야 함. 사무국장을 주민 중에서 뽑게 하고, 마을활동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파견공무원과 함께 주민출신의 사무국장이 일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시의 지원조직만이 아니라 동에는 종합적인 지원조직을 장기적으로는 두어야 할 것임.
- 동지원조직은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운영이 가능함. 성산1동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이미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은 마을투어가이드, 교육, 축제, 사람채용, 분쟁조정 등을 하고 있음. 상근자 1명이 운영함. 연단위로 5천~6천 정도의 인건비가 있으면 운영이 가능함. 1억이면 충분함.
- 주민주도형의 위탁을 하더라도,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시, 구 사업들의 공모에 참여하고, 이들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 따라서 자체의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징세를 할 필요는 없음.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도 됨.
- 해외사례 중에서 로체스트시는 의제만들기를 통하여 마을공동체가 형성됨. 마을의제가 무엇인가? 민원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리스트를 만들고 하면서 자연히 마을리더가 나타남.
- 한국에서도 생협은 자발적 구조임. 반모임을 하면서 관계망이 형성되고, 대표자가 대두됨. 반모임을 하면서 튀는 사람이 생기고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됨.
- 어떤 형태로든 마을지원센터가 생기더라도 사업비를 주지는 말고, 상근 운영직원에 대한 비용만 주면 됨.
- 주민자치지원센터는 동의 허브가 되면 됨. 동은 허브 네트워크가 되면 됨. 허브의 구성체들은 각각 지원을 받음.
- 대표를 굳이 뽑지 않아도 활동하는 과정, 의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리더가 추천되게 됨.
- 필요한 것은 동단위의 촉진자로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있으면 됨.
- 주민총회에서 자연스럽게 추천되면 됨. 동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됨.

- 자원봉사센터를 현재는 구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구청장의 직할부대처럼 됨.
- 동단위로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운영해야 할 듯함.
- 통장은 주민총회에서 추천되도록,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의 시범실시가 필요함.
- 성산1동, 은평구, 강북구 등에서 5개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듯함.
-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원회방식이 아니라 워킹그룹방식을 제안함.
- 워킹그룹은 다른 행정으로부터 터치 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들의 활동가를 지원하는 방식임.
- 이 워킹그룹을 가능하게 할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함.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행정측과 민간측의 대표들이 들어감.
- 동단위에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함.
- 입대위도 지역권력이라고 봄. 최근에는 주택정책실(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사업으로서 마을보조금지원사업(9억원)을 실시함. 커뮤니티 플래너가 25명 정도 있음.

2 **설문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연구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행정 및 자치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33조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 김찬동 연구위원 ☎02-2149-1214
연 구 원 : 이정용 연구원 ☎02-2149-1119

1. 통장제도는 농촌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쇠퇴하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폐지한다
② 작동하는 기능만 두고 수당 등을 축소한다
③ 그대로 둔다
④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수당은 그대로 둔다
⑤ 주민자치와 관련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2.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표시)

( ) ( ) ( )

① 선출방식
② 기능보완
③ 권한부여와 역할의 혁신

3 통장제도의 혁신방안으로서

3-1 선출방식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장추천 임명

② 공개공모후 동장임명

③ 공개공모후 추첨

④ 통주민총회후 추천

⑤ 통주민 직접선거

3-2 기능보완방안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보조 사무의 강화

② 복지사무 추가

③ 환경관련 사무 추가

④ 공동체만들기 사무 추가

3-3 권한부여와 역할의 혁신방안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권한 부여(행정통장)

② 자치권한 부여(자치통장)

③ 행정권한에 부가하여 자치권한 부여

④ 자치권한에 부가하여 행정권한 위탁

4.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의 제도설계에 비해서 그 역할이 왜소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소한 역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대로 둔다.

②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로 부여한다.

③ 동행정사무에 관한 협의와 심의권한을 부여한다(협력형).

④ 동사무소의 사무기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한다(통합형).

⑤ 동사무소의 사무기능을 폐지하고 동자치권한을 부여한다(주민주도형).

5.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표시)

① 선출방식

② 사무권한

③ 자치예산세원

6. 주민자치위원회의 혁신을 위하여

6-1 선출방식은 어떤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동장추천

② 구청장추천

③ 공개공모 후 추천

④ 공개공모 후 추첨

⑤ 주민총회의결추천 방식

⑥ 직접선거방식

6-2 사무권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자치회관 운영사무 심의

② 동사무소 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권

③ 동사무소 행정사무에 대한 심의권과 자치사무에 대한 의결권

④ 동사무소 자치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권

6-3 자치예산과 자치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대로

② 행정사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참여예산제 도입

③ 자치사무에 대한 예산편성권 부여

④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세원부과권 부여

7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통반장제도 폐지

② 통반장제도 기능보완

③ 통반장제도에 주민자치역할 부여

④ 통반장제도와 주민자치위원회제도의 병립운영

⑤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권한 강화

⑥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권한 강화와 통반장제도에 주민자치기능 부과

⑦ 주민자치회(주민주도형)로의 전환

8 주민자치관련으로 자치계층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주민자치회 단일계층

② 주민자치회 단일계층으로 하되 근린주민조직의 협의체(허브기능)

③ 주민자치회의 하위계층으로 주민자치분회를 두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분회의 연합체로서 운영

④ 주민자치회의 하위계층으로 근린공동체를 두고 주민자치회는 이들의 연합체로 운영

9 주민자치회를 둘 경우 행정과의 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동행정의 자문조직으로 협력

② 동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조직으로서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

③ 시/군/구의 행정과정에 자문하는 방식으로 협력

④ 시/군/구의 행정과정(예산편성, 도시계획 등)에 일정한 정도 참여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서의 협력

⑤ 시/군/구 의회 자문조직 혹은 지역참여조직으로서 협력(기초계층의 비정당화를 전제)

10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0-1 거주지는 ? (　　) 시군구 (　　) 읍면동

10-2 거주하는 주택은 ? (　　) ① 아파트단지, ② 연립주택, ③ 단독주택

10-3 연령은? (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10-4 월소득은? (　　) ① 0~300만, ② 300만~500만, ③ 500만~800만,
④ 800만~1000만, ⑤ 1000만 이상

10-5 성별은? (　　) ① 남, ② 여

10-6 직업은? (　　) ① 대학(교수), ② 연구소(연구위원),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기타

10-7 주민자치관련의 활동은? (　　)

① 통반장, ② 자치위원, ③ 입주자대표위원, ④ 주민자치회컨설팅단,
⑤ 지방행정공무원